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27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예고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내용

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대전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사. 준공영제 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건설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 공동관리”란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송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 및 부대사업수입 등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3조(준공영제 운영) ① 시와 운송사업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시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와 운송사업자는 경영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영제 활성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연구·조사 및 포럼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협의회는 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영제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준공영제 운영·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결정·변경 및 정산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입금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잉여 적립금 처리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성과금 배분에 관한 사항
8. 이해당사자간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9.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의결하기 전에 운송사업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수입금 공동관리, 재정지원금의 배분 등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무
2.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무

3. 재정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무

4.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에 처리하도록 한 사무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현금수입금 관리 실태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운송원가 결정·적용) ① 시장은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는 해당연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수종사자 인건비 항목은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2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9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분야는 전문 회계기관에, 서비스분야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는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배분하되 성과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등)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재정지원금과 사업운영 등 준공영제 관련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비리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조사·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1년 이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누락금액의 50배 중 큰 금액을 환수 또는 원가에서 감액·정산하고, 감액·정산한 해당연도의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당수급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원가에서 감액·정산하고, 감액·정산한 해당연도의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금을 차등 배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가 제5조제4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5조제5호 규정 중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금 차등 배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사·감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지급 보류 및 해당연도 기본이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다.

제13조(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



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운영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을 중지한 경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

제15조(의회 보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제16조(세부 사항)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협의회 구성 등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

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 3. 19.>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효율의 결정
-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1)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 3)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
-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



- 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 직접 처분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2. 7. 31.,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9. 3. 19.>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효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하고,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

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 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법 제49조의6에 따른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3. 삭제 <2014. 7. 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 7. 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 과 그 징수

###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2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제12호(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및 제15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6., 2013. 3. 23., 2019. 3. 19.>

#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 관련 조문 : 제2조(정의)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요금인상은 감안하지 아니함
2. 운수종사자 인건비 : 4.48% 증가율 적용 / 최근 5년간(2014~2018) 평균
3. 연료비 : 매년 5% 증가율 적용 / 2019년 CNG 단가상승분
4. 고정비 : 인건비성 3.74%(최근 4년 임금인상률 평균), 나머지 1.46%(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 적용
5. 수입금 : 매년 0.5% 증가율 적용
6. 유가보조금 : 동일금액 적용

나. 추계 결과 : 461,521백만원(5년간)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시비확보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가. 지속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함에 따라 적정한 요금인상 필요

▶ 요금 100원 인상 시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 증가('15.7.1. 150원 인상)

5. 작성자 : 버스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정필구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출 ④		75,662,160	83,871,971	91,854,501	100,526,598	109,605,873	461,521,103
운송원가 ①		217,275,679	225,943,816	234,988,843	244,427,630	254,277,812	1,176,913,780
	운수종사자 인건비	140,784,145	147,091,274	153,680,964	160,565,871	167,759,222	769,881,476
	연료비	26,937,058	28,283,911	29,698,106	31,183,011	32,742,162	148,844,248
	고정비	49,554,476	50,568,631	51,609,773	52,678,748	53,776,428	258,188,056
수입금 ②		138,932,019	139,390,345	140,452,842	141,219,532	141,990,439	701,985,177
유가보조금 ③		2,681,500	2,681,500	2,681,500	2,681,500	2,681,500	13,407,500
재정지원금 ④=①-②-③		75,662,160	83,871,971	91,854,501	100,526,598	109,605,873	461,521,103
재원 조달		75,662,160	83,871,971	91,854,501	100,526,598	109,605,873	461,521,103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0
	지방교부세						0
							0
자체 수입	소 계	75,662,160	83,871,971	91,854,501	100,526,598	109,605,873	461,521,103
	지방세	75,662,160	83,871,971	91,854,501	100,526,598	109,605,873	461,521,103
	세외수입						0
							0
지방채							0
복권기금							0
공기업 특별회계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